

제3차 ICN 서울총회의 의미와 결과 - M&A 심사절차 관련 국제기준 4개 채택 성과 -

지난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세계 공정거래위원장간 회의인 ICN (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제3차 연차총회가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었다. ICN은 2001년에 미국, EU, 한국 등 14개국의 주도로 창설된 세계 공정거래위원장간 협의체로서 현재 76개국의 86개 경쟁당국이 회원으로 가입한 경쟁정책 분야 최대규모의 국제기구이다. ICN 회원국들의 경제규모는 전세계 GDP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ICN 서울총회에는 48개국 57개 경쟁당국의 최고책임자를 비롯해 변호사, 경제학자 등 민간전문가, OECD, WTO 등 국제기구 인사 등 총 260여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규모의 연차총회가 되었다. 특히 우가르테(Fernando S. Ugarte) 멕시코 경쟁위원회 위원장(ICN운영그룹 의장), 몬티(Mario Monti) EU 경쟁집행위원, 뵈게(Ulf Boege) 독일 연방카르텔청장, 다케시마(Kazuhiko Takeshima)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사무엘(Graeme Samuel)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위원장, 스콧(Sheridan Scott) 캐나다 경쟁위원회 위원장, 제니(Frederic Jenny) OECD 경쟁위원회 의장 등 경쟁정책 분야의 저명인사들이 대부분 참석해 회의의 격이 매우 높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회식에 참석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축사를 통해 “참여정부가 기업의 투명경영과 공정경쟁의 정착을 통해 시장경쟁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장개혁을 힘써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경영 투명성의 제고,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의 정착,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의 촉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한국경제가 국제적 규범

화에 맞추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시장의 자유경쟁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혁신을 이끌어 가는 요체”라고 규정하고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경쟁정책 분야에서 경쟁법·제도의 국제적 수렴과 국가간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ICN이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번 서울총회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보다도 M&A 심사절차와 관련해 4개의 국제기준(모범관행, Best Practice)이 추가로 채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전됨에 따라 국경을 초월한 국제적 M&A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나 국가마다 서로 다른 절차와 기준을 가지고 있어 M&A를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ICN은 기업들의 이러한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경쟁당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차 나폴리 총회 때부터 합병분야의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이미 지난 2차 메리다 총회때까지 국제 M&A에 대한 심사의 관할권, 합병신고시 제출자료의 범위 등에 관해 7개의 모범관행을 채택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채택되는 4개 모범관행은 다음과 같다. 첫째, M&A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절차적 공정성), 둘째,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기업비밀정보는 최대한 보호되어야 한다(비밀정보 보호), 셋째, 기업들에 불필요한 비용이나 시간 부담이 없도록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조사절차), 넷째, 경쟁당국들은 가능한 법적 테두리내에서 다른 나라 경쟁당국과 심사결과를 상호 조정해야 한다(경쟁당국간 상호조정).

이번 서울총회의 또 다른 중요한 성과는 카르텔 작업반의 창설이다. 카르텔은 M&A와 함께 경쟁정책의 국제적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 카르텔은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돈을 직접 빼앗아 가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로서 경쟁당국들의 제1의 적이 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카르텔의 범위가 넓어져 소비자들의 피해규모는 점점 커지는 반면 그 조사와 적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경쟁당국간 협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카르텔 작업반에서 카르텔의 폐해를 바르게 측정하는 방법, 카르텔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기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2차 총회에서 신설됐던 ‘규제산업작업반’에서는 전기, 통신, 가스 등 네트워크 산업에서 경쟁법의 효과적인 집행방안이 논의됐다. ‘역량강화 작업반’에서는 개도국·체제 전환국의 효과적인 경쟁법 도입을 위한 기술지원모델과 경쟁당국이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지지를 얻고 위상을 확보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병주 공정위 정책국장은 앞으로 한국은 4월 19일 개소된 서울 ‘OECD 아시아 지역 경쟁센터’를 통해 우

리의 경험과 OECD의 선진제도를 결합, 개도국·체제전환국에 대한 교육훈련 및 자문을 강화함으로써 개도국과 선진국간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임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서울총회에서는 우리나라가 브라질과 함께 '역량강화 작업반'의 공동의장으로 새로 선출됨으로써 ICN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운영그룹의 멤버임과 동시에 2개 작업반(가입작업반, 역량강화작업반)의 의장직을 맡게 돼 ICN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아울러 이번 서울총회에서 신설된 '이행점검' 세션에서는 그 동안 ICN의 작업성과에 대한 회원국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논의가 있었는데, 한국을 비롯한 EU, 브라질, 남아공 등에서 ICN 논의성과에 대한 자국의 이행상황 및 이행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발표했다. 강대형 공정위 사무처장은 우리나라가 2003년 외국기업의 기업결합 신고절차를 만들면서 ICN의 모범관행을 적용한 사실을 설명했다. ICN에서 채택되는 모범관행이나 가이드라인 등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회원국들에게 그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나, 각국이 모범관행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때 경쟁정책의 국제적 수렴이 한 걸음 진전돼 나갈 것이다.

이번 ICN 서울총회는 아시아에서는 처음 열린 것으로 아시아 지역에 경쟁문화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서울총회를 통해 그 동안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역할을 수행해 온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더욱 제고됐고, 외국인들이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직접 확인하는 기회도 되었다.